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관점에서 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平和觀)

-인식적 측면의 이론적 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金慶一*

目次

- I. 머리말
 - II. 민주주의 평화사상
 - III.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
 - IV. 인식적 측면의 이론적 연계성
 - V. 맺음말
-
-

I. 머리말

민주주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역사적으로 인간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근대 일본의 자유민권론자들 역시 민주주의를 인류공통의 가치로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일본사회를 변혁해 보고자 하였다. 즉 이들은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던 당시 일본사회의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민주주의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상들은 대체로 국민주권, 입헌정치, 민선의회, 반전평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권론자들은 국내의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식민제국주의 노선과 같은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감행을 가능케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전쟁이 소수 지배계층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일반국민들에게는 인적·물적 피해만을 초래한다고 단언하면서 민주정치체제 수립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즉 대부

* 국립중앙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

분의 국민들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 분명한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정치체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립이 평화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한다는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은 국가 간 관계의 경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민주국가는 전쟁을 선호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정치체제와 평화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과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평화지향적이라는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 탈냉전 이후부터 전개되어 온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과연 세계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의 중심적인 연구 분야들 중의 하나가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다.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도 평화의 실현을 전제로 단위수준의 요인이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의 정치체제가 국제체제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민주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을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주요내용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주요내용과 근대 일본의 자유민권론자 5인, 즉 나카에 쇼민, 우에키 에모리, 우치무라 간조, 고토쿠 슈쓰이, 이시바시 단잔의 평화관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며,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이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을 민주주의 평화사상에 투영하여 논구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의 자유민권론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물들을 활용하여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민주주의와 평화, 양자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적 측면의 이론적 연계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제와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방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들에 대한 비계량적 분석방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상기의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에 대해 이론적 의미를 추가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본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해 정치체제와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근대 일본의 자유민권론자들의 견해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논리를 이해하고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이론적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민주주의 평화사상

현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사상사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시대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치체제와 평화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단의 단일정치체제를 지양하고 중용의 원리에 입각한 혼합정체가 최선의 정치체제이며, 혼합정체는 절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혼합정체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정체와 평화의 상관성에 대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전통은 근대의 공화제적 평화사상으로 계승되었다.¹⁾

칸트(Immanuel Kant)는 대의제에 기초한 공화제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상정하였으며, 공화제를 통해서 법치가 가능하고 진정한 민의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만 영구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칸트는 도덕적 진보를 통해서 영구평화의 목적에 근접할 수 있으며, 도덕적 진보는 공화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화를 선호하며,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화제하에서는 인민들이 전쟁의 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평화의 실현을 위해 칸트가 상정한 공화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인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

현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혼합정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사상과 근대 칸트의 공화제적 평화사상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평화지향적이며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부재하다는 명제는 현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핵심적인 연구주제이다. 현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에서 전제하는 민주주의는 대체로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³⁾ 민주주의 평화사상가들의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며,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치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뱁스트(Dean Babst)는 1789년에서 1941년까지 116개의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부재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럼멜(R. J. Rummel)과 러셋(Bruce Russett)도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드(E. Weed)는 현실주의적 평화론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부재하다는 민주주의 평화사상을 주장

1) 최상용(1998) 「민주평화사상과 한국」 『평화연구』7, pp.271-274.

2) Ray, James Lee(1995)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Columbia,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pp.1-4; Doyle, Michael W.(199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pp.1151-1169; Huntley, Wade L.(1996) "Kant's Third Image: Systemic Sources of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1), pp.45-76.

3) Russett, Bruce(1983)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14.

하였다.⁴⁾

경험적 연구와 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성을 문화적·규범적(Cultural·Normative) 모델과 구조적·제도적(Structural·Institutional)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규범적 모델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타협과 설득이라는 국내 정치과정의 민주적인 이해관계 조정방식을 대외관계에도 적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주의 국가는 군사력과 같은 폭력적 수단이 아닌 국제법, 외교협상, 국제기구의 중재 등과 같은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해결 방식이 가능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적인 문화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민주주의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⁵⁾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사상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이 국내정치과정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규범에 익숙해져 있다고 본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결정권자가 타협과 비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정될수록 민주적 규범이 다른 민주국가와의 관계를 규제한다.⁶⁾ 이러한 규범들은 정책결정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선택의 방향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구조적·제도적 모델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거의 없는 이유가 민주정치제도에 있다고 본다. 권력분립, 민주적 정책결정과정,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내면화된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성들이 전쟁을 지양하게 하며, 타협과 설득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쟁을 정책적 수단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하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 등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권자가 충분한 여론의 수렴 없이 전쟁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며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실패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⁷⁾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는 선거를 통해 국내정치과정에 반영됨으로써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성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구조와 제도에 기인한다고 보는 구조적·제도적 모델은 구성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민

4) Rummel, R. J.(1983) "Libertarianism and International Viol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1), pp.27-71; Russett, Bruce *Op. cit.*, pp.43-81; Weed, E.(1983) "Extended Deterrence by Superpower Allia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2), pp.231-254.

5) Lake, David A.(1992) "Powerful Pacifists: Democratic States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pp.24-37.

6) Russett, Bruce *Op. cit.*, p.35.

7) *Ibid.*, pp.24-42.

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나 국민들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사상에 대해 이론적·실제적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이론적 측면에서 협의의 민주주의 개념⁸⁾을 적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을 간과할 수 있으며, 각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구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의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쟁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감행해온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소위 비밀전쟁(Covert War)은 민주주의 국가가 평화지향적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적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평화사상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협의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적 다양성⁹⁾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민주주의 국가의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행위는 초강대국 미국의 국익을 전제로 한 자의적인 판단과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평화지향적이며, 폭력의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자유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이론적 지평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즉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의 규범이 국제사회에까지 확대·적용될 경우 전쟁과 같은 폭력행위는 최대한 억제될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러셋과 오닐(J. Oneal)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서유럽의 진전에 근거하여 경제적 상호의존, 다자주의적 제도 등 자유주의적 변수들이 서유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¹⁰⁾ 서유럽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평화가 구축된 데에는 이 지역 국가지도자들이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민주주

8) 협의의 민주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권력획득을 위해 자유롭고 광범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경쟁과 참여를 보장할 높은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Diamond, Larry(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10.

9) Becker, C.(1941) *Moder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4-5.

10) 러셋과 오닐에 의하면, 전후 서유럽의 국가지도자들은 전쟁의 원인이 민주주의의 붕괴에 있었다고 보고 역내의 권위주의적 이념들을 제거하고 안정된 민주주의적 체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다음으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전체주의 체제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보고 중상주의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통상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호의존적 개방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교환의 증대는 협력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규칙의 제정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믿음 하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국제제도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신옥희 (2002) 「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美国学』25, pp.280-282.

의 규범들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규범들을 대외정책에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그리고 다자주의적 제도의 형성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상황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추구하게 만든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유럽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토대로 한 지역적 평화의 구축은 다른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平和觀)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사상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자유민권론자들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자유민권론자들은 근대 일본의 식민제국주의정책이 일본국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식민제국주의정책은 일본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며 식민지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팽창정책에 수반되는 침략전쟁은 필연적으로 다수 일본국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민제국주의정책은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지배층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자유민권론자들은 민주주의의 부재로 말미암아 소수 특권층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침략전쟁이 자행될 수 있다고 보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통해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대 일본의 선구적인 자유민권론자였던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은 프랑스 유학을 통해 서구민주주의의 이념을 접하게 되면서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사회계약설, 입헌제 등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그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한 ‘민약론(民約論)’을 저술한 바도 있다. 나카에 조민은 공동체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구상하였다.¹¹⁾ 자유민권에 대한 그의 인식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의 보장을 전제로 하면서, 자유와 민권이 인간의 근본도리이며 국가권력이 자유와 민권을 억압할 수 없다는 신념을 확립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그는 민권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이러한 자유와 민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카에 조민은 전쟁이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그는 전쟁이 군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각국의 군비증강정책이 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던 당시 일본의 상비군제도와 징병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토착병(土着兵)제도의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¹³⁾

11) 米原 謙(2003) 「일본에서의 문명개화론」 『동양정치사상사』2(2), pp.215-220.

12) 桑原武夫編(1966) 『中江兆民の研究』(東京: 岩波書店, 1966), p.162.

나카에 죠민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신념은 국제사회로까지 확장되어 국제적인 민주주의 연대를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유민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국권의 확대와 침략적 팽창주의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민주주의의 국제적 연대에 대한 나카에 죠민의 구상은 무엇보다도 평등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구상은 당시 일본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일본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탈을 당시 일본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파렴치한 행위로 보았으며, 이는 민권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국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의 국제적 적용이라는 나카에 죠민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듯이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국제적인 적용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자율적·수평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곧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았다.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는 국내에서 수학한 대표적인 자유민권론자이며 청년시절 필화(筆禍) 사건으로 투옥을 경험하면서 자유와 인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고, 민주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반하는 당시 일본의 천황제(天皇制)를 비판하였다. 우에키 에모리는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입헌제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대의정체(代議政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민선의원 선출을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우에키 에모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보통선거의 실시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 국민자치와 국민소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¹⁶⁾ 이러한 우에키 에모리가 구상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는 그가 초안한 ‘동양대일본국헌법안(東洋大日本國憲法按)’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혁명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국제적 연대에 대해 우에키 에모리는 나카에 죠민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

13) 松永昌三(1990) 「中江兆民一平和國家の構想」, 小松茂夫・田中浩 『日本の国花思想(上)』(東京: 青木書店), pp.138-139; 色川大吉(1981) 『自由民権』(東京: 岩波新書), p.99.

14) 松永昌三 前掲書, 「中江兆民一平和國家の構想」, p.84; 大江志乃夫(1969) 『非戰の思想史』(東京: 講談社), p.91.

15) 松永昌三 前掲書, 中江兆民一平和國家の構想」, p.83.

16) 裴成東(1977) 「西歐民主主義思想의 東洋的 受容」 『제2회 한국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p.83.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식민제국주의 세력들을 비난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조선과 중국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선과 중국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시도한 바 있다.¹⁷⁾ 그는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히 수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에키 에모리는 국권은 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당시 일본의 민권을 도외시키는 국가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정부가 추진한 식민제국주의 및 군비확장 정책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익과 행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¹⁸⁾ 그는 일본정부의 군비확장을 통한 팽창주의 정책이 일본국민들의 인적·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제국주의 정책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반하며, 소수 권력엘리트들의 이익만을 위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자유와 민권의 신장이야말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한 우에키 에모리는 당시의 군대제도와 군비증강을 일본국민들의 자유와 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하고, 징병제도의 폐지와 군비지출의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우에키 에모리는 자신의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이 민주적 헌법에 기초한 만국공의정부(万国共議政府)의 수립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국공의정부가 수립된다면 각국이 팽창주의 노선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군대와 군비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¹⁹⁾

기독교 신자이며 미국 유학을 경험했던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는 당시 일본정부의 부정적인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근대 일본의 국가적 성격이 평화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소인(小人)이며 자국중심적인 국민은 가장 퇴보하는 국민이다. 자국의 부강만을 구하고 타국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국민이 부강을 이룬 것을 역사상 본적이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국가 간의 수평적·호혜적 관계를 강조하였다.²⁰⁾ 그는 근대 일본의 국가적 사명이 침략주의를 통한 부국강병에 있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의 화합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이 평화의 실현과 공동의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평화국가가 되기를 희망했다.

우치무라 간조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군비의 축소와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전쟁행위의 제도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나는 비개전문자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전쟁폐기론자이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며, 이는 커다란 죄악이다. 그러한 대죄를 저지른다면 개인이나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중략) 전쟁의 이익은 전

17) 家永三郎(1984) 『植木枝盛研究』(東京: 岩波書店), p.200.

18) 上掲書, p.92, p.106.

19) 明治資料研究連絡會編(1978) 『民権からナショナリズム』(東京: 御茶の水書房), p.112.

20) 鹿野政直(2005) 『近代国家を構想した思想家たち』(東京: 岩波書店), p.98.

쟁의 해독을 상쇄할 수 없다. 전쟁의 이익은 강도의 이익이며 일시적인 이익이다. (중략) 강탈하는 자의 도덕은 타락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강탈한 것의 몇 배로 최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²¹⁾라고 전쟁의 폐기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전쟁의 폐기가 평화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실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상호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은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졌으며, 경제적 합리주의 측면에서 당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부적절한 정책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이 연성적 자원을 토대로 한 평화지향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시바시 단잔은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였다.²³⁾ 그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존중받아 왔으며 개인의 존재는 늘 빛을 발하여 왔다. 그러나 절대자가 이를 무너뜨리고 손상시켰다”라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법은 탐관오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표명하면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였다.²⁴⁾

이러한 이시바시 단잔의 언급은 당시 일본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천부인권과 개인적 자유,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의 국제적 확대를 통해 당시 식민제국주의체제의 억압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각국 국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시바시 단잔의 자유민권적 평화관은 일본이 소국주의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포기, 군비철폐, 국제협력 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의 식민지 포기 주장은 일본의 국리민복(國利民福)이 해외식민지 개척에 있지 않으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식민제국주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져올 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정부가 즉각적으로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 기조와 기존의 식민지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²⁵⁾

특히 이시바시 단잔은 경제적 합리주의를 통해 식민통치가 부적절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식민통치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못하고 국비를 소모하는 단순한 영토의 확장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일본의 식민통치는 자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보았다.²⁶⁾ 즉 그는 식민지가 자원문제나 인구문제를 해소할 만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이 식민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그만큼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여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생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²⁷⁾ 그는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식민제국주의 정

21) 『万朝報』(1903. 6. 30).

22) 内村鑑三(1967) 『内村鑑三集』(東京: 筑摩書房), pp.313-314.

23) 増田弘(1990) 『石橋湛山研究』(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p.1-3.

24)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編(1971) 『石橋湛山全集』1(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27.

25) 増田弘 前掲書『石橋湛山研究』, p.96.

26)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編 前掲書, 『石橋湛山全集』1, p.213.

27)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編(1971) 『石橋湛山全集』4(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16; 鴨武彦編(1996) 『大

책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시바시 단장은 당시 조선과 대만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식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식민통치나 침략정책보다는 평화적 협력이 일본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식민지 영유를 비롯한 팽창주의 정책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시바시 단장은 팽창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실제적 수단을 제공하는 군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쟁이 거액의 군비 지출과 수많은 인간생명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보았으며, 국제신용체계를 파괴하여 자국민과 타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쟁의 해악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일본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군사부문에 투입되는 자본을 산업발달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부를 증대하는 하는 길은 오직 평화주의를 토대로 하여 국민의 온 힘을 학문의 발전과 기술·산업의 진보에 투자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⁸⁾ 이시바시 단장의 군비철폐 주장은 안보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군비증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⁹⁾ 무엇보다도 이시바시 단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해 평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였다.³⁰⁾ 전후 이시바시 단장은 수상을 역임하면서 일본의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 추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역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급진적·혁명적 자유민권론자로 알려진 고토쿠 슈쓰이(幸徳秋水)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반식민제국주의적 평화론을 주창하면서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강제적인 국민의 희생을 거부했다.³¹⁾ 그는 사회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민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전쟁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토쿠 슈쓰이의 “군대는 흉기이며 전쟁은 죄악이다. 평화와 진보 그리고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쟁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²⁾라는 언급은 그의 전쟁에 대한 철저한 혐오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전쟁을 도덕적인 죄악, 정치적인 독(毒), 경제적인 손실로 규정하고, 전쟁 때문에 사회의 정의는 파괴되고 국민의 권리는 유린당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고토쿠 슈쓰이의 확고한 반전(反戰) 의식은 보편적인 인간애와 계급적 차별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전쟁이 소수의 특권층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전쟁행위로 인해 인권이 억압받고 불평등이 조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토쿠 슈쓰이는 당시 강제적으로 전쟁에 징집되는 일반 청년들이 부와 명예가 보장된 소수의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차별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지금의 사회조직과 징병법을 잘 보라.

日本主義との闘争』(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78.

28) 慶應義塾大学法学部編(1983) 『慶應義塾創立一二五年記念論文集』(東京:慶應法学部), p.260; 中村尚美(1993) 『日本の国家目標と小日本主義』 『社会科学討究』39(2), p.341.

29) 김경일(2007)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민주주의 구상에 대한 고찰」 『선주논총』10, p.180.

30) 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蔵 『石橋湛山文書』, p.561.

31) 「紀元節を哀しむ」 『万朝報』(1898. 2. 11).

32) 「開戦論の流行」 『万朝報』(1903. 6. 19).

돈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는다. 그동안 누차 공평하다는 변명을 들었지만, 지금 병졸들의 실상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이다. 병역은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의 징표이다”³³⁾

고토쿠 슈쓰이는 1903년 사카이 토시히고(堺利彦) 등과 함께 평민사(平民社)를 결성하고, 자유·평등·박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평민신문(平民新聞)을 창간하였다. 그는 평민신문의 지면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계급제도 철폐, 보통선거 실시,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권 보장, 소작인 보호법 제정, 군비철폐 등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고자 했던 고토쿠 슈쓰이는 자신의 구상을 국제사회에까지 확대·적용하였다. 그는 전쟁은 소수 특권계급의 탐욕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분배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각 국가의 일반국민들이 단결하여 사회적 계급을 타파하고 공평한 분배구조를 이룩하게 된다면 전쟁이라는 추악한 행위는 사라질 것이고 평화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등사상에 입각한 국제적 민주주의 연대를 형성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IV. 인식적 측면의 이론적 연계성

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측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권존중과 자유의 보장에 대해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나카에 죠민은 인권과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였으며, 인류의 발전은 인권의 신장과 자유의 확대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요컨대 우에키 에모리는 민권과 국권 중에서 민권이 우선하며 국권은 민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특히 우에키 에모리는 자신이 제안한 헌법안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시바시 단잔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의 불가침성과 개인적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토쿠 슈쓰이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애를 인식의 토대로 삼고 있다. 당시 자유민권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반식민제국주의와 반전(反戰)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인권과 자유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식민제국주의와 전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유린될 것이며, 개인적 자유는 억압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민제국주의 정책과 전쟁행위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유민권론자들은 평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나카에 죠민과 우에키 에모리는 공통적으로 인권의 존중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33) 神崎清(1974) 『実録 幸徳秋水』(東京: 読売新聞社), p.202; 「戦争論者に告ぐ」 『万朝報』(1903. 7. 7).

34) 『平民新聞』 1号(1903. 11. 15); 10号(1904. 1. 17); 14号(1904. 2. 14); 18号(1904. 3. 3).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권의 존중,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했다. 특히 고토쿠 슈쓰이는 소수 계급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국민이 희생하는 당시 일본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만인이 평등하며 국가는 국민 다수의 복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유민권론자들의 인식은 민주주의 평화사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권론자들이 자유주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인식체계와 동일한 맥락을 이룬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일본의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공통적으로 외부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즉 소극적 자유³⁵⁾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사상이 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자유민권론자들은 보다 보편적인 평등을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민권론자들은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평등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는 평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권론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정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 일본의 자유민권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입헌주의, 국민자치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나카에 죠민은 사회계약설과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화제, 입헌정치, 법치주의 등을 주장하였다.³⁶⁾ 우에키 에모리 역시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주제에 대한 비판과 입헌제와 저항권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정체(代議政體)의 실현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보통선거, 의회민주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공평한 조세제도, 지방자치,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토쿠 슈쓰이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급제도와 특권을 폐지해야 하며,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다만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에 비해 민주주의 평화사상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구조적·제도적 모델에서 민주정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로 제시하고 있는 제도적 유형들은 자유민권론자들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칸트의 근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이상형으로 제시한 공화제는 자유민권론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35) 이정균(2003) 『민주주의론』(서울: 형설출판사), p.39.

36)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編 前掲書, 『石橋湛山全集』1, p.69.

민주정치체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카에 조민은 공화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정치를 주장한 바 있다. 전체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자유민권론자들의 인식은 민주주의 평화론에서 독단적인 정책결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2. 평화에 대한 인식 측면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공통적으로 평화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였으며, 국가적·국제적 수준의 평화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전쟁이 야기하는 비참한 결과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였다.³⁷⁾ 하지만 자유민권론자들이 보다 적극적 평화,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했던 반면, 민주주의 평화사상에서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즉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⁸⁾ 민주주의 평화사상에서는 평화구축의 관건이 한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 달려있다고 보았으며, 사회구조가 평화지향적으로 변화한다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평화지향적인 사회구조란 다음 아닌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자유민권론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수평성과 자발성 그리고 호혜성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국제사회에 확대·적용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나카에 조민은 근대 일본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는데, 특히 그는 1882년 이웃국가인 조선에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식민제국주의적 행태가 국가 간 수평성과 자발성에 반하는 몰염치한 것이며, 조선과 중국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³⁹⁾ 우치무라 간조는 바람직한 국가 간 관계를 수평성과 자발성 그리고 호혜성에 입각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보고 일본의 술선수범을 촉구하였다. 나카에 조민과 마찬가지로 우치무라 간조도 일본이 우호적 자세로 조선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그는 당시 일본정부가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침탈을 자행한 데 대해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⁴⁰⁾ 우에키 에모리와 이시바시 단잔도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수평성·자발성·호혜성을 강조하였으며, 타국에 대한 침탈을 부도덕한 행위라고 단언하였다.⁴¹⁾ 특히 이시바시 단잔은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 간 수평적 협력이 일방적인 침탈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유민권론자들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평화사상

37) 엄정식(1992) 「칸트와 현대의 평화사상」 『철학』37, pp.173-175.

38) 최관경(2003) 「21세기의 평화교육」 『교육철학』24, pp.188-191.

39) 「論外交」 『自由新聞』(1882. 8. 17); 松永昌三(1972) 『中江兆民と植木枝盛』(東京: 清水書院), p.83.

40) 中村尚美 前掲書, 日本の国家目標と小日本主義, p.332.

41) 『愛国新誌』4号(1880. 8. 29).

이 추구하는 국가 간 관계의 이상형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공유하는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관계는 당연히 수평성과 자발성 그리고 호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권론자들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구상은 공통적으로 강한 반전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쟁정책의 포기와 군비의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나카에 조민과 우에키 에모리는 전쟁을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민권과는 무관한 국권만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들은 전쟁이 소수 권력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보았다. 우치무라 간조는 전쟁의 해악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토쿠 슈쓰이 역시 전쟁의 부도덕성과 해악성을 강조하였으며, 민주주의가 부재한 부조리한 사회구조가 전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시바시 단잔은 경제합리주의 측면에서 전쟁의 부적절성을 설명하고, 군비의 폐기를 통한 전쟁정책의 포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자유민권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쟁을 초래하는 당시 일본의 식민제국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자유민권론자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전쟁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평화사상이 전쟁의 해악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 측면

민주주의와 평화의 연관성에 대해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 대부분은 거의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카에 조민은 당시 일본정부의 군사적 수단에 의지한 팽창주의정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을 일본사회의 민주주의 부재라고 보았다. 즉 그는 민권이 무시되는 국권우선의 정치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쟁정책이 감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공화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특히 나카에 조민은 번벌정치(藩閥政治)라는 당시 일본의 과두적(寡頭的) 정치체제가 사회적 부조리를 야기하고 군사적 모험주의에 기초한 팽창정책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다. 우에키 에모리는 민의에 기초한 의회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전쟁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전쟁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대국주의 노선 때문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민의는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 특히 그는 군비와 전쟁의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부담을

42) 실제로 당시 일본정부는 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이익선과 주권선 개념에 입각하여 전쟁불사(戰爭不辭)적인 대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大山梓編(1966) 『山縣有朋意見書』(東京: 原書房), pp.196-200.

가중시키는 군비확장정책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으며, 즉각적인 징병제도의 폐지와 군비지출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우치무라 간쥬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일국이기주의(一國利己主義)가 전쟁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는 일국이기주의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당시 일본 사회의 민주주의 부재가 일국이기주의의 발로인 식민제국주의 정책의 추진을 가능케 하였다고 인식했다. 특히 그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보다 더 민주주의가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민주주의의 신장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토쿠 슈쓰이도 민주주의의 부재가 전쟁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전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전쟁이 소수 지배계층의 탐욕에서 비롯된 비민주적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면 전쟁행위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시바시 단잔 역시 민주주의의 부재가 전쟁을 야기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의 마련된다면 전쟁행위가 정책적 수단으로 선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폐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경제합리주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권론자들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신념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국제적인 확산과 연대에까지 이어진다. 예컨대 나카에 죠민은 아시아 각국의 자발성과 수평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지역적 연대를 주창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이념을 국가단위에까지 확대·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유·평등·박애를 무기로 한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국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들이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⁴³⁾ 우에키 에모리는 각국의 민주주의 세력들이 연대하여 민주적 헌법에 기초한 만국공의정부(万国共議政府)를 세운다면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고토쿠 슈쓰이는 각국의 일반국민들이 단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철폐하고 각국의 민주주의 세력들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한다면 전쟁행위는 사라질 것이며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치무라 간쥬와 이시바시 단잔 역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연대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이시바시 단잔은 자발성과 수평성 그리고 호혜성에 입각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유민권론자들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권론자들의 정치체제가 평화구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루소와 칸트의 근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권의 소재와 국내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국가의 대외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군주정보다는 민주정이, 전제정보다는 공화정이 보다 더 평화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주

43) 松永昌三 前掲書, 『中江兆民と植木枝盛』, p.84; 大江志乃夫 前掲書, 『非戦の思想史』, p.91.

44) 明治資料研究連絡會編 前掲書, 『民権からナショナリズム』, p.112.

나 소수의 특권계층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일반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⁴⁵⁾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평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가 가장 이상적인 해답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국가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고 평화의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과 민주주의 평화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고 대의제를 지향하며 민주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 자유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민권론자들이 주창한 민주주의의 국제적 연대는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평화사상이 신자유주의와 연결되면서 상호의존의 심화와 국제적 제도의 형성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측 모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협력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정치체제와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을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논리에 대비해 논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자유민권론자들의 확고한 반식민제국주의 및 반전 의식이 기본적으로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당시 일본정부의 전쟁을 불사한 식민제국주의 정책이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전형적인 역기능 현상이며, 이러한 침략적 팽창주의 노선으로 인해 야기된 전쟁은 소수 지배층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인적·물적 부담만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일반국민들과는 무관한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야기한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는 억압받게 되며 기존의 불평등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권론자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갖추어진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확립된다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와 같은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은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양측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서 이론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에 나타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인식과 크게 다

45) 최상용 앞의 논문, 「민주평화사상과 한국」, p.276.

르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성 측면에서는 자유민권론자들의 인식이 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인식 측면을 살펴보면, 평화를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보고 있고, 분석수준 면에서 국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 간 관계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여 자발성·수평성·호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성들에서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인식과 부합하였다. 다만 평화의 개념과 반전의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유민권론자들이 보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 보다 더 적극적 평화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으며, 자유민권론자들이 보다 더 강한 반전의식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유민권론자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와 평화의 연관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였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국제적인 확산과 연대를 통하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유민권론자들의 인식은 정치체제와 평화의 관계를 바라보는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민권론자들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 평화사상의 인식적 토대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평화관이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이론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평화에 대한 염원이 인종과 문화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소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인류가 희망하는 항구적인 평화는 아직 멀게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의 내용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며 민주주의는 평화를 수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参考文献】

- 김경일(2007) 「일본 자유민권론자들의 민주주의 구상에 대한 고찰」 『선주논총』10, p.180.
- 米原 謙(2003) 「일본에서의 문명개화론」 『동양정치사상사』2(2), pp.215-220.
- 裴成東(1977) 「西歐民主主義思想의 東洋的 受容」 『제2회 한국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p.83.
- 신옥희(2002) 「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美国学』25, pp.280-282.
- 엄정식(1992) 「칸트와 현대의 평화사상」 『철학』37, pp.173-175.
- 이정균(2003) 『민주주의론』(서울: 형설출판사), p.39.
- 최관경(2003) 「21세기의 평화교육」 『교육철학』24, pp.188-191.
- 최상용(1998) 「민주평화사상과 한국」 『평화연구』7, pp.271-274.
- 家永三郎(1984) 『植木枝盛研究』(東京: 岩波書店), p.200.
- 慶應義塾大学法学部編(1983) 『慶應義塾創立一二五年記念論文集』(東京:慶應法学部), p.260.
- 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蔵 『石橋湛山文書』, p.561.
- 大江志乃夫(1969) 『非戦の思想史』(東京: 講談社), p.91.
- 大山梓編(1966) 『山県有朋意見書』(東京: 原書房), pp.196-200.
- 鹿野政直(2005) 『近代国家を構想した思想家たち』(東京: 岩波書店), p.98.
- 明治資料研究連絡会編(1978) 『民権からナショナリズム』(東京: 御茶の水書房), p.112.
- 桑原武夫編(1966) 『中江兆民の研究』(東京: 岩波書店), p.162.
- 色川大吉(1981) 『自由民権』(東京: 岩波新書), p.99.
-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会編(1971) 『石橋湛山全集』1(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27.
-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会編(1971) 『石橋湛山全集』4(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16.
- 松永昌三(1972) 『中江兆民と植木枝盛』(東京: 清水書院), p.83.
- 松永昌三(1980) 「中江兆民一平和国家の構想」 小松茂夫・田中浩 『日本の国花思想(上)』(東京: 青木書店), pp.138-139.
- 神崎清(1974) 『実録 幸徳秋水』(東京: 読売新聞社), p.202.
- 鴨武彦編(1996) 『大日本主義との闘争』(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78.
- 中村尚美(1993) 「日本の国家目標と小日本主義」 『社会科学討究』39(2), p.341.
- 内村鑑三(1967) 『内村鑑三集』(東京: 筑摩書房), pp.313-314.
- 増田弘(1990) 『石橋湛山研究』(東京: 東洋經濟新報社), pp.1-3.
- 『平民新聞』1号(1903. 11. 15), 10号(1904. 1. 17), 14号(1904. 2. 14), 18号(1904. 3. 3).
- 「紀元節を哀しむ」 『万朝報』(1898. 2. 11), 「開戦論の流行」 『万朝報』(1903. 6. 19), 『万朝報』(1903. 6. 30), 「戦争論者に告ぐ」 『万朝報』(1903. 7. 7).

『論外交』 『自由新聞』(1882. 8. 17).

『愛國新誌』 4号(1880. 8. 29).

Becker, C. (1941), *Moder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4-5.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10.

Doyle, Michael W.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pp.1151-1169.

Huntley, Wade L. (1996), "Kant's Third Image: Systemic Sources of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1), pp.45-76.

Lake, David A. (1992), "Powerful Pacifists: Democratic States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pp.24-37.

Ray, James Lee (1995),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Columbia,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pp.1-4.

Rummel, R. J. (1983), "Libertarianism and International Viol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1), pp.27-71.

Russett, Bruce (1993),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14.

Weed, E. (1983), "Extended Deterrence by Superpower Allia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2), pp.231-254.

要 旨

本研究は、近代日本自由民権論者らの平和観と民主主義の平和思想の理論的連繋性について論究したものである。当時、自由民権論者らは日本の非民主主義的な政治体制が戦争を起こすしかないという考えのもと、侵略的な対外政策の推進を可能にしたという認識があった。これらの戦争がほとんどの国民に苦痛と人的・物的な被害を招いたため、一般国民は自国を大國にするための戦争よりは、平和を願っていると考えており、こうした国民らの意思を反映する、民主主義の政治体制が確立すれば、戦争を政治的な手段として選ぶ必要はないと確信したのである。こうした自由民権論者らの平和観とは、国際社会の経験的な事実を基にした民主國家において、戦争を願っていないのである。また民主主義の國家間では、戦争がほとんど起きることがないという平和思想の論理と連繋性をもっていると言える。上記のような論拠を基にして、本稿では、まず民主主義の平和思想の主な内容と近代日本の自由民権論者の 5 人の平和観を考察してみた。これらを土台に民主主義と平和、そして相互連関性に対する認識の側面から、自由民権論者らの平和観が、民主主義の平和思想と理論的にどう連繋されているのか、に対して分析してみたのである。学問的に本研究は、近代日本自由民権論者らの平和観に対する理論的意味を入れただけではなく、現代的な視角から再構成してみたことに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民主主義, 平和思想, 自由民権論, 平和, 日本, 認識の側面, 理論的連繋性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702-756)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55-4 미래타운 101동 305호
電 話 : 010-9379-5069
e-mail : kimkiphd@hanmail.net